

電力은 國民의 生存權과 直結



설동선

영광원자력문화진흥회 회장

전기에너지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전력문화 혜택속에 살고 있는 것에는 원자력산업의 역할을 제외할 수는 없다. 원자력산업은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속의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전력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에너지개발을 위한 혁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18C 산업혁명기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 기계문명의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 이후 19C에 와서 전기에너지는 실용화 되고 많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전력생산의 수단과 그 이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마침내 오늘날과 같이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방법을 실용화 하기에 이르렀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보다 연료의 수송과 비축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발전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원가의 절감효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높였으며, 첨단산업 등 국내관련 산업을 일으는 원동력으로 국가 산업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에너지와 식량문제이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아득한 면 옛날 태고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을 지혜롭게 평화적으로 이용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불을 비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한순간 화마로 변하여 우리의 생명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폭군이 되고 만다.

원자력발전소도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하리라 믿을 수 있고 지극히 미미한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많은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안전성에 대하여

필자는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면과 안전성면에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할 수 없으나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기에 실제적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발전소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살기좋은 세상에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은 다른 일반 산업

체에 근무하면 상당한 대우도 받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다.

원전이 그토록 생명에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직장이라면 아무리 대우가 좋고 장래가 보장된다 고 하더라도 단 한사람도 근무하지 않으려 할 것이 아닌가.

둘째, 원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약 250여명 정도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항상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쟁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는 원전이 불안전하다는 반핵논리는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현대 기계문명의 이기속에서 인간은 항상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는 기계 문명을 외면 할 수 없다.

밤 9시 뉴스시간을 보면 각 산업현장 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포기할 수도 없고, 비행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78년 고리원자력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원자력 사고로 인한 피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깝게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은 원자탄 폭발 당시국으로서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비참한 경험을 체험한 국민이므로 원자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크기 때문에 반원전 운동도 매우 활발한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원전 4대 강국으로 부상하여 92년 12월 31일 현재 42기의 원전이 운전중에 있고 12기가 건설중이며, 동시에 1기가 추가 건설 계획 중에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지지와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일 것이다.

일상생활에 한순간도 없으면 견디어 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전력이다.

전력은 이처럼 소중한 에너지다. 이제는 도시, 농촌, 어촌, 어디서나 전력공급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모든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자력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얻어지는 혜택과 그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원자력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TV, 라디오, 또는 신문, 잡지 등 일반대중 홍보활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달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원자력행정체제의 강화

원자력산업의 추진에 관한 최고 의결집행 기관은 원자력위원회

회이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부처 장관급 공무원, 기타 추천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운 민원문제에 대한 행정적 충분한 뒷받침이 미비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사업자인 한전당국과 주민들로부터는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어 마침내 반핵운동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 행정적인 새로운 뒷받침 없이는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이나 관계부처가 국민이 원자력에 대한 충분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

새롭게 등장한 지역주의, 집단 이기주의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산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첫째,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하고자 하나 후보지역주민들의 결사 반대에 부닥쳐 한결음도 전향적 진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80년대 5공화국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재야인사들은 80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환경 보존을 위한다는 명분을 전개하여 원전에 관한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함으로써 주민을 오도하는 행위로 변모하였다.

녹색운동을 전개하는 환경단체들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폐기물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깨끗한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강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전이 바다를 오염시켜서 많은 어종이 고갈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량의 산업폐기물과 국민들의 생활폐수에 의한 오염이 원인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모두 원자력에 있는 것으로 오도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 필요

그러나 이러한 그릇된 상황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설득력 있는 반증을 충분히 제시 못하므로 원자력발전소는 소문과 같이 많은 부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

원자력산업은 이제 사업자에게 위임하지 말고 정부에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소상이 국민에게 밝히고 확고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안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함께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노력을 펼쳐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원자력사업을 당의 기본 정강정책으로 국민에게 제시하며 소신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방기관장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지표명이 있어야 하고, 반상회를 통하여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일 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셋째, 전반적인 사회 개혁으로 지난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문민정부에 대하여 절대다수 국민들이 신뢰와 새로운 희망을 갖는 이 시대 국가 최고인 통치자인 대통령은 전력은 국력으로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원자력산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며, 이를 위하여는 TV 방영으로 특별담화를 발표한다면 원자력산업에 대한 미래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홍보활동 강화

홍보를 전담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미래지향적 홍보활동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 확보를 얻기 위하여 지난 92년 3월 설립하였다.

원자력홍보 전담기구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과거 사업자가 주관하는 홍보를 벗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사생대회, 글짓기대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많이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의 협력증진

지역주민의 원전에 대한 방사능피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원전주변지역 환경방사능감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원전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구매운동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소득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주민, 지역 행정기관, 발전소간의 협력기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주민불만요소 해소와 상호 신뢰증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원전사업이 지역유치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돈독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사업자는 지역주민의 참뜻을 대폭 수용하고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기료 혜택 등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혁명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미래를 확약받을 수 있을 것이다.